광주는 기계·전남은 전자…지역에 산업기술인력이 없다

인력부족률 광주 2.3%…고졸·석사 순
전남 6.0%, 3년째 전국 최고 수준
사업체 규모 작을수록 인력난 심각

반도체·친환경에너지 등을 특화산업으로 내건 전남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이 전국에서 3년 연속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광주 2.3%·전남 6.0%로, 전국 평균 2.2%를 웃돌았다.

지역에서 부족한 산업기술인력은 광주 672명·전남 2514명으로, 전국 부족인력 대비 각각 1.7%·6.3%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제조업·통신·과학 부문 등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관리자 등으로 일하는 인력을 말한다.

전남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부산(0.6%)의 10배에 달한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은 이공계든 비이공계든 모든 전공에서 산업기술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전남 비이공계 부족률은 18.9%였고, 공학계 8.4%, 자연계 6.6% 등으로 3개 전공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력 부족률을 나타냈다.

인력난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심했다. 전남 지역 종사자 10~29인 사업체 부족률은 10.3%였고, 30~99인 7.3%, 100~299인 2.9%, 500인 이상 1.8%, 300~499인 0.6% 등이 뒤를 이었다.

학력별로 보면 전남에서는 석사 인력이 가장 부족했다. 석사 부족률이 29.9%로, 전국 평균 석사 부족률(2.6%)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이어 학사 9.4%, 박사 7.2%, 전문학사 6.4%, 고졸 3.8% 등 순으로 부족률이 높았다.

광주에서는 고졸 부족률이 3.2%로 가장 높았고 석사(2.8%), 학사(1.3%), 전문학사(1.1%), 박사(0.4%) 등 순이었다.

■ 광주전남 산업기술인력 전공별 부족률

(2024년 기준·단위 %)

	광주	전남
계	2.3	6.0
비이공계	0.8	18.9
공학계	1.4	8.4
자연계	0.7	6.6

산업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기계, 전남에서는 전자 부문 기술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광주에서는 전자 산업 인력이 410명 부족하며 부족률이 6.3%에 달했다. 전자 산업에 이어 IT 비즈니스 4.0%(22명), 자동차 3.1%(151명), 바이오·헬스 1.2%(13명) 등 순으로 부족률이 높았다.

전남 기술인력 부족률은 기계 39.9%(862명), 섬유 22.6%(69명), 전자 18.7%(750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1.5%(179명), 음료 제조업 9.7%(6명), 연구개발업 5.7%(61명), 바이오·헬스 5.6%(2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산업체에서 사표를 낸 기술인력은 1년 새 '두 자릿수' 급증했다.

2024년 퇴사인력은 광주 2445명·전남 292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3.5%(614명)·55.2%(1042명) 늘었다. 반면 전국 퇴사자는 0.7%(1127명) 줄었다.

광주 퇴사자의 66.1%(1616명)는 경력자였고, 나머지 33.9%(829명)는 경력 1년 미만 신입자였다. 전남 퇴사자의 80.8%(2368명)는 경력, 19.2%(561명)는 신입사원이었다.

광주에서는 전자(760명), 자동차(505명), 소프트웨어(246명), 화학(230명), 반도체(132명) 순으로 퇴사자가 많았다. 전남은 화학 산업체 퇴사자가 1174명으로, 전체 산업기술인력 퇴사자의 40.1%를 차지했다. 이어 전자(539명), 조선(239명) 건축기술·엔지니어링(200명), 비금속광물(140명), 소프트웨어(111명) 등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용원 퇴임식에 인권위 직원들 피켓시위 발언을 손팻말에 적어 시위하고 있다.

5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용원 상임위원 이임식에서 김 위원이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단 뒤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조합원들이 공식회의록에 기록된 김 위원의 폭언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통합특별시에 450조 규모 첨단산업 유치할 것"

주요 10개 그룹 등 지방투자 계획
반도체·이차전지 등 권역별 육성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가 국내 대기업의 300조원 지방 투자 계획 중 절반인 150조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5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지방투자 300조원 중 최소한 150조원 이상을 전남·광주로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나아가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에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별도로 3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김 지사의 발표는 앞서 지난 4일 경제계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있다.

김 지사는 "삼성, SK, 현대, LG 등 대기업이 30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재계가 과감한 투자 결단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지사는 "AI·에너지 수도 전남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특구의 강점을 살려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실현할 안정적 친환경 전력, 충분한 용수와 저렴한 산업 부지까지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어 반도체·이차전지·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라며 "이러한 최적의 여건을 기반으로 전남도는 기업과 함께 우리 지역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기업 유치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거점인 전남·광주 반도체 삼축 클러스터를 비롯해 수소,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등을 권역별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대규모 기업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의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남·광주에 투자하는 기업은 저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지방우대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해달라"고 건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차 종합특검에 판사 출신 권창영 임명

목포고 졸업…"철저한 사실 규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남긴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 특별검사에 권창영(사진·5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권 특검은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판사 출신으로 노동·중대재해법 전문가로 통한다.

대전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9년 춘천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창원지법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직 판사 시절 '선원법 해설'을 출간할 정도로 학구적이며,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권 특검은 지난달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이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과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과 뇌물 공모 정황 등 총 17개 사안이다. 기존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국민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격한 법리 적용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검팀은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지며, 6일부터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무죄

명,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지역 총판 모집 안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국내 최초 렌탈공급 등록 업체

DB 1억원 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120251388541
장애인 인증:제2024-089

주요 공급 대상
▶ 초·중·고·대학교, 각계 정부기관, 군부대, 종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기업, 삼성, LG, SK 등 기타
▶ 교실, 강의실,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

사업의 강점
▶ 국내 최초 렌탈 및 정부조달 방식으로 무한 수익창출
▶ 교육기관 및 행정 공공기관, 군부대, 종교단체, 대기업
▶ 시장 안전성, 지속적 성장 특별 초기 참여분께 우선권 제공

창업 기회대상
▶ 다년간 행정 공공기관 및 교육관련 유사 직종 퇴직자
▶ 교육 행정기관, 군부대근무 종교단체 지역 기반 경력자
▶ 조직관리 지역총판, 새로운 창업 희망자 우대

MK 엠케이솔루션㈜
연락처 : 010-2366-8843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6년 1월 2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6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빛김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6번 102 (월전동)
사내이사 정 훈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고단133 일반교통방해
- 피고인 : 김선숙

위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전경태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 227-9600
예향구독 (062) 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